

 금융위원회	<h1>보 도 자 료</h1>				
 금융감독원	<b>보도</b>	<b>2020. 9. 8.(화) 조간</b>	<b>배포</b>	<b>2020. 9. 7.(월)</b>	
<b>책 임 자</b>	금융위 FIU 기획협력팀장 오 화 세(02-2100-1730)	<b>담 당 자</b>	고 선 영 사무관 (02-2100-1741)		
	금융위 금융혁신과장 윤 병 원(02-2100-2530)		최 민 혁 사무관 (02-2100-2534)		
	국무조정실 금융정책과장 최 치 연(044-200-2190)		범 진 이 사무관 (044-200-2187)		
	법무부 상사법무과장 정 수 진(02-2110-3167)		이 규 철 서기관 (02-2110-3256)		
	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 부국장 이 원 하(02-3145-8129)		서 선 무 조사역 (02-3145-8526)		

## 제 목 : 가상통화 투자설명회를 통한 코로나19 확산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
- ☐ 9.4일 개최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, 최근 코로나19 확산과 관련되어 문제가 제기된 불법 가상통화 투자설명회에 대한 방역강화 및 소비자 보호 필요성이 논의되었습니다.

### [가상통화 투자설명회 현황]

- ☐ 가상통화 투기열풍이 불던 '17년부터 사업자들은 실내강의 방식의 다양한 가상통화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여 일반인들의 가상통화 투자를 유치해 왔으나,

\* 가상통화 투자 외에도, 비트코인 채굴기, 가상통화 펀드 등 다양한 명목으로 투자 유치

- ☐ 최근에는 가상통화 투자설명회가 비공식적인 방식으로 카페 등 실내에서 소규모 인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추세입니다.

- 기존의 불법 다단계, 방문판매업자들이 가상통화 투자를 빙자하여 유사수신(원금보장) 및 사기(수익률 과대광고)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,

\* '19년중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를 통한 가상통화 빙자형 혐의 업체 수는 92개사로, '18년 대비 48개사 증가

- 투자설명회 참석자 등을 대상으로 모집수당을 주면서 주변 지인에게 가입을 권유하도록 하거나,
- 사업 초기에는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을 지급하며 지인에게도 추천하도록 하는 등 피해자의 선의를 이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.

※ 가상통화 관련 유사수신 행위 주요 수법

- ▶ (다른 사업과 연계) 고유의 사업모델(카지노, 태양광, 금 채굴 등)로부터 지속적인 수익이 발생하고, 이러한 수익과 연계된 코인을 제작했다며 거짓 홍보
- ▶ (최소가격 보장) 가상통화 거래소에 상장 후 업체가 지속적인 매매를 통하여 특정 가격선을 방어하여 원금이 보장된다고 허위 광고
- ▶ (허위 시스템 제시) 해당업체에서 개발한 유사 전자지급거래 플랫폼을 통해서만 거래내용을 조회할 수 있게 한 후, 현금화 요구시 시스템상 오류 등을 핑계 대며 현금화를 지연시키고, 이후 잠적·도주
- ▶ (가상통화 채굴) 해외에서 가상통화를 채굴하는 공장을 운영한다 하며 투자시 일정 수익이 계속 발생하여 원금이상으로 수익이 발생한다고 선전

- 코로나 사태로 인한 '사회적 거리두기' 와중에도 가상통화 등의 다단계식 사업설명회는 암암리에 개최되어 방역의 사각이 발생하였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

[소비자 피해 방지 및 불법행위 엄정 대응]

- 일반 시민들께서는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가급적 자택에 머물러 주시고 소규모 모임, 투자설명회 참석 등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☐ 또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참고하여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.

- ①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해 준다고 할 경우, 일단 투자사기를 의심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② 피해자는 가상통화 등 최신 금융기법에 비교적 익숙하지 않은 중장년층의 은퇴 후 여유자금을 노리고 접근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.
- ③ 업체가 투자금을 모집해 오면 모집액의 일정 비율을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할 경우, 다단계 유사수신 가능성을 의심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④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을 경우 투자하기 전에 반드시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(☎1332)에 미리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☐ 사기나 유사수신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즉시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(☎1332)에 제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.

- 「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,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벌금형 등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.
- 또한, 금융감독원은 유사수신 피해를 예방하고자 「불법금융 파파라치」 제도를 통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, 일반 시민의 적극적인 신고 및 제보를 부탁드립니다.

\* 신고내용의 정확성, 피해규모, 수사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포상금 지급여부·규모를 결정

☐ 향후 금융위원회·금융감독원, 국무조정실 및 수사기관 등은 필요시 가상통화 투자설명회와 관련하여 입수된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.

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	 출처표시	본 자료를 인용 보도 할 경우 출처를 표기 해 주십시오. <a href="http://www.fsc.go.kr">http://www.fsc.go.kr</a>	금융위원회 대변인 <a href="mailto:prfsc@korea.kr">prfsc@korea.kr</a>	 질병관리본부 콜센터	 나부터 지키는 우리 모두의 건강 해외감염병 NOW
--	---	--	---	---	--

**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**